



의안번호	제 2024 - 13호
보 고 연 월 일	2024. 4. 29. (제131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목 차

I. 제161차 전체회의	1
1. 일시·장소	1
2. 참석자	1
3. 주요 안건	1
II.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2
1. 개관	2
2. 설정 범위	4
3. 유형 분류	8
III.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14
1. 개관	14
2. 설정 범위	17
3. 유형 분류	20
IV. 향후 일정	21

【별첨】

이혜랑,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분류(이혜랑)”
이성화,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범위 및 유형 검토(이성화)”
이혜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정현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양형기준 수정검토(정현주)”

I. 제161차 전체회의

1. 일시·장소

- 일시: 2024. 4. 15.(월) 15:00 ~ 18:00
- 장소: 대법원 1601호 회의실

2. 참석자(수석전문위원 1명, 전문위원 11명, 간사 1명)

- 수석전문위원, 김현아, 박복순, 윤지영, 이성화, 이혜란, 이혜량, 정현주, 최익구, 최준혁, 최호진, 한상규 전문위원(이상 가나다 순)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설정 범위, 유형 분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설정 범위, 유형 분류)

II.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1. 개관

가. 검토 배경

(1) 연혁

- 2011. 3. 21. 설정, 2011. 7. 1. 시행
-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반영 필요성

- 2023. 5. 16. 개정, 2023. 11. 17. 시행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의 약 64%를 차지하는 ‘대면편취형’ 사기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유형에 포함됨
- 법정형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상향됨(제15조의2)

(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 반영 필요성

- 2016. 3. 29. 제정, 2016. 9. 30. 시행되면서, 보험사기행위를 처벌하는 구성요건이 신설되었으나 양형기준 설정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보험사기 발생 횟수 및 피해금이 증가함에 따라 양형기준 설정대상 포함 여부 검토 要

나. 관련 법령(음영처리 된 부분은 이미 징역형 양형기준이 설정)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제347조의2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제348조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제1항), 제1항의 방법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제2항)	이하 벌금
	제348조의2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349조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제1항),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제2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제351조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제350조의2의 죄를 범한 자	형 1/2 가중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	사기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벌금 병과 가능)
	제3조 제1항 제2호	사기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 징역(벌금 병과 가능)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정의(제2조 제2호):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1년 이상 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5배 벌금(병과 가능)
	제15조의2 제2항	제1항의 미수범	
	제15조의2 제3항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형 1/2 가중
	제16조	거짓으로 제3조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제1호), 거짓으로 제3조 제4항에 따른 지급정지를 요청한 자(제2호), 거짓으로 제6조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제3호), 거짓으로 제7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한 자(제4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 제1항 제1호 ¹⁾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제8조 제1항 제2호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한 자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제9조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	형 1/2 가중
	제10조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	
	제11조 제1항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제1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벌금병과가능)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제2호)	3년 이상 징역 (벌금병과가능)
	제14조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2. 설정 범위

가. 형법

(1) 편의시설 부정이용(형법 제348조의2) ⇨ 제외(견해 일치)

- 사기범죄군 양형기준 제정 당시 경미한 범죄로 구공판 또는 정식재판청구 사건 수가 거의 없다는 이유로 양형기준 설정에서 제외. 달리 사정이 변경된 바 없으므로 설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함

(2) 부당이득(형법 제349조) ⇨ 제외(견해 일치)

- 사기범죄군 양형기준 제정 당시 구성요건적 행위가 기망행위를 전제로 하는 사기죄와 다르고 발생빈도가 매우 낮다는 이유로 양형기준 설정에서 제외. 달리 사정이 변경된 바 없으므로 설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함

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1) 전기통신금융사기(제15조의2 제1항), 상습범(제15조의2 제3항) ⇨ 포함(견해 일치)

- 동 규정이 ‘대면편취’를 포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 일반을 처벌하는 구성요건으로 개정되었고, 현재 검찰에서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동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하고 있음
-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증가추세에 있으며 법정형이 상향되었는데(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1년 이상 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5배 벌금), 이에 관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번 설정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 다만,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규정에 의하면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으나, 사기와 공갈의

1) 현행법상 제8조, 2024. 2. 13. 법률 제20303호로 개정되어(2024. 8. 14. 시행) 제8조 제1항 제1호로 변경됨. 사기범죄 수정안 양형기준안 의결시점(2025. 1. 13.) 기준으로 신법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편의상 신법을 기준으로 표기함

죄질과 범행방법이 다르고, 별도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므로, 행위유형에서 공갈에 의한 범행은 제외

(2) 전기통신금융사기 미수(제15조의2) ⇨ 제외(견해 일치)

- 현재 살인죄를 제외하고는 미수범의 양형기준을 설정한 바 없으므로 제외함

(3) 제3조 제1항2)에 따른 허위 피해구제 신청(제16조 제1호), 제3조 제4항3)에 따른 허위 지급정지 요청(제16조 제2호) ⇨ 제외(견해 일치)

- 허위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 계좌의 거래가 전면적으로 정지되면, 이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이른바 ‘통장뭉기’ 범죄임
- 죄질, 범행수법에서 공갈죄와 유사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구별 ⇨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일관된 양형기준 및 위 범죄에 적용되는 양형인자를 마련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
- 아직 발생빈도가 높지 않고, 향후 판결례가 축적되는 것을 기다려 설정범위에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제6조 제1항4)에 따른 허위 피해구제 신청(제16조 제3호), 제7조 제1항5)에 따른 허위 이의제기(제16조 제4호) ⇨ 제외

-
- 2)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①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3)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④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 4) 제6조(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피해자로서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구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5)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

(견해 일치)

- 발생빈도가 드물어 양형기준 설정의 실익이 낮음
- 판결문 검색결과에 의하면 제16조 제3호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제16조 제4호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도 5건이 되지 않음

다. 보험사기방지법

(1) 보험사기(제8조 제1항 제1호), 상습보험사기(제9조), 가중 처벌(제11조) ⇨ 포함(견해 일치)

- 사기죄의 양형기준 설정 당시 조직적 사기에 보험사기가 포함되어 설정되었는데도, 보험사기죄를 처벌하는 위 규정은 사기죄 양형기준 설정이후 2016. 9. 30.부터 시행되어 현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보험사기 범죄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증가추세에 있는데, 현재 보험사기죄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이 없어 곤란하므로 이번 설정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2) 보험사기 행위 알선·유인·권유·광고(제8조 제1항 제2호) ⇨ 제외(견해 일치)

- 개정된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시행일은 2024. 8. 14.로, 이번 양형위원회(제9기)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 의결시점(2025. 1. 13.)에는 그 시행이 예정되어 있기는 하나, 처벌사례 및 양형사례가 없으므로 양형기준 설정이 어려움
- 기존 수사실무상 보험사기 행위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면 보험사기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음

2.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제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동 규정이 시행된 이후 보험사기 알선 등 행위가 독립적으로 기소되는 판결례가 축적된 후 양형기준 설정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함

(3) 보험사기 미수(제10조) ⇨ 제외(견해 일치)

- 현재 살인죄를 제외하고는 미수범의 양형기준을 설정한 바 없으므로 제외함

(4) 보험사기행위 조사업무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 등 제공·누설·목적 외 사용 범죄(제14조) ⇨ 제외(견해 일치)

- 보험사기행위 조사업무 종사자의 직무수행 범죄이고 보험사기 범죄와는 본질이 다름
- 판결문 검색결과에 의하면 동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 설정의 실익도 낮음

라. 설정 범위 정리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통신사기 피해환급 법	제15조의2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공갈 제외)를 행한 자/정의(제2조 제2호)	1년 이상 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5배 벌금(병과 가능)
	제15조의2 제3항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형 1/2 가중
보험사기 방지법	제8조 제1항 제1호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제9조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	형 1/2 가중
	제11조 제1항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제1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벌금병과가능)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제2호)	3년 이상 징역 (벌금병과가능)

3. 유형 분류

가. 현행안

01¹ 일반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5	300억 원 이상			

02¹ 조직적 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5	300억 원 이상			

나. 검토

(1)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상습죄의 별도 유형분류 요부 ⇨ 견해 대립

(가) 제1안: 별도 유형분류 없음(현행 유지)(9인, 다수의견)

○ [현행 유형분류의 설정 연혁]

-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 당시 대유형 분류와 관련하여, 최초 검토 단계에서는 ‘일반사기’와 ‘특수사기’로 나누되 ‘특수사기’에 ‘전화금융사기’와 ‘보험금사기’를 설정하여 별도의 형량범위와 양형인자를 정하는 것으로 하였다가, ① 피해액이 5억 이상이 되는 경우 특정 경제범죄법이 적용되는 사기죄와 비교하여 전화금융사기의 형량범위가 일반 사기죄보다 낮아지는 형량역전현상이 발생하는 점, ②

다양한 사기유형 중에서 유독 전화금융사기만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의 비판이 있어 조직적 사기를 특수한 유형의 사기로 규정하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사기범죄를 일반사기로 규율하는 것으로 정함 ⇨ 이러한 양형기준 설정 당시 논의는 현재에도 유효함

○ [행위태양의 관점]

-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기범죄와 본질적으로 같고,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사기 사건들 중에는 보험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외 형태의 범죄들에서 피해액이 보다 크고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된 경우가 많음(이른바 라임 사건, 구로 지역주택조합 사건)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한하여 달리 취급할 이유가 크지 않음

○ [형량의 관점]

- 가중처벌이 요구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조직적 사기로 분류되어 가중된 형량범위를 적용할 수 있고 그와 같이 적용하여 왔으며, 그 외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일반 사기죄와 달리 설정할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음

○ [제2안에 대한 비판]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닌 이상 일반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경우 일반사기죄와 구별되는 형량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면 현행 ‘일반사기’에서 특별양형인자의 조정으로 반영할 수 있음. 제2안에 의하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반 전기통신금융사기죄까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과 같은 형량범위가 권고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함
- 조직적 사기를 조직적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그 외의 조직적 사기로 분류하더라도 형량범위와 양형인자에 있어서 차이를 두기가 용이하지 않음
-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이미 조직적 사기 양형기준에 따라 일반사기보다 훨씬 높은 형량범위가 적용되고 있고, 조직적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행이라도 “초범이 고수의 알바라고 생각하고 미필적 고의로 피해액의 수거책이 되는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현행 조직적 사기보다 더 높은 형량범위를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 보이스피싱의 가중처벌의 필요성은 현재의 조직적 사기 양형기준의 가중영역을 수정하거나, 특별가중인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음

(나) 제2안: 조직적 사기에 중유형으로 신설(3인)

대유형분류	소유형 분류	
	유형	구분
01. 일반사기	1	1억 원 미만
02. 조직적 사기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가. 일반 조직적 사기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나. 전기통신금융사기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5	300억 원 이상

- 여러 유형의 조직적 사기 중 이른바 ‘보이스피싱 · 쿠팡 ·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을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일반 사기범죄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은 그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빈번하게 거액을 편취하는 특성 때문임
- 이러한 범죄의 특성과 상향된 법정형을 고려하면 이를 별도의 유형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음

(2) 보험사기 ⇨ 별도 유형분류 없음(견해 일치)

- [현행 유형분류의 설정 연혁]
 - 앞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부분에서 본 바와 같고, 특히 보험금사기는 일반사기와 형량에 차이를 둘 필요가 없어 조직적 사기를 특수한 유형의 사기로 규정하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사기범죄를

일반사기로 규율하는 것으로 정함 ⇨ 이러한 양형기준 설정 당시 논의는 현재에도 유효함

○ [행위태양의 관점]

-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기범죄와 본질적으로 같고, 보험사기에 한하여 달리 취급할 이유가 크지 않음

○ [형량의 관점]

- 일반 사기죄와 징역형의 법정형이 동일하고, 피해액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 경우에도 징역형의 법정형이 동일함
- 달리 취급할 실익이 없음

(3)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의 별도 유형분류 여부 ⇨ 견해 대립

(가) 제1안: 별도 유형분류 없음(현행 유지)(7인, 다수의견)

- 일반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다는 범죄태양의 본질에는 차이가 없음. 다만 1개 범죄의 이득액을 기준으로 그 법정형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나, 현재 양형기준에서도 이러한 법정형의 차이를 고려하여 형량범위를 달리 적용되고 있음
-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3.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의하면 사기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할 때,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도록 하면서,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형법상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는 같은 유형이더라도 형량범위 하한이 다르게 적용됨
- 양형기준 상향 필요성은 현행의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하거나, 특별가중인자의 신설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적절함
- 재산범죄 내지 이득범죄의 규율 체계는 그 행위로 인하여 취득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현재의 양형기준도 이를 기초로 하되 행위태양과 범행수법이 다른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를 구분하면서 이득액을 소유형에 반영하여 형량범위를 달리하고 있는데, 이득액의 합계가 같음에도, 단지 피해자 1인에 대한 이득액 합계가 크다는 이유 또는 포괄범죄가 된다는 이유로 별도의 독립적인 대유형을 신설할 만큼의 규범적·현실적 필요성이 크지 않음

-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러 그 이득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와 피해자 한명에 대하여 5억 원의 피해를 입게 한 경우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두 사안이 별도의 양형기준표를 적용하여야 할 만큼 죄질 및 범행수법에 있어서 크게 구별된다고 보기 어려움
- 특정경제범죄법에서 가중하고 있는 공갈죄, 횡령·배임죄의 양형기준, 특정범죄가중법에서 가중하고 있는 뇌물죄도 현재의 사기죄의 양형기준과 동일한 형태로 하나의 양형기준표를 사용하면서 형량범위가 달라지도록 설정되어 있음

(나) 제2안: 일반 사기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를 각 대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대유형에 일반 사기와 조직적 사기를 중유형으로 분류(5인)

- 현재 양형기준은 대유형을 일반 사기와 조직적 사기로 나누고,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를 별도로 취급하지 않고 있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 구체적으로 세분화되고 강화된 양형기준이 필요
-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이 최대 무기징역이고 유기징역의 경우 50년⁶⁾까지 선고가 가능한데, 현행 일반 사기 제5유형

6)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사기(5억 이상)는 3년~30년(형법 제42조)이고, 제2호의 사기가 경합범 가중되면 최장 징역 45년까지 가능하며, 누범 가중되면 징역 50년(장기 2배 가중+상한선 50년)까지 선고 가능하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사기(50억원 이상)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무기징역 또는 5년~30년(비가중시)/50년(가중시)까지 선고 가능함

가중영역의 상한이 13년이고, 조직적사기 제5유형의 가중영역이 11년 이상으로 되어 있어, 권고 형량범위의 상향이 필요함

- 현행과 같은 범죤태양이 아닌 법정형을 기준으로 사기죄의 대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적절함

Ⅲ. 전자금융거래법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1. 개관

가. 검토 배경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 양형기준 연혁

- 2019. 3. 25. 의결, 2019. 7. 1. 시행
-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 일부 양형인자 정비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의 필요성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 증가

- 이른바 ‘대포통장’을 거래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는 각종 범죄에서 범죄수익의 취득 및 은닉을 가능하게 하는 범죄로,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연계성이 큼
- 보이스피싱 범죄의 증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에 관한 관심도 높아짐

(나) 법률 개정

- 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2020. 8. 20. 시행)
 - 설정대상 범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기존 3년 ↓ 징역 or 2천만 원 ↓ 벌금)으로 상향
 - 제49조 제4항 제5호(계좌와 관련된 정보 제공·보관·전달·유통) 신설
- 2023. 9. 14. 법률 제19734호로 개정(2024. 9. 15. 시행예정)
 - 제49조 제5항 제6호의2, 제9호의2 신설

나. 관련 법령(음영처리 된 부분은 이미 징역형 양형기준이 설정)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전자금융 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1조의4 제1호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한 자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 하 벌금 (병과 가능)
	제2호	제21조의4 제2호를 위반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한 자	
	제3호	제21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일시에 대량의 신호,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시킨 자	
	제4호	제26조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제28조제4항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제49조 제2항	제1호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제2호	위조되거나 변조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제3호	분실되거나 도난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제4호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	
	제5호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제49조 제3항	형법 제214조	행사할 목적으로 전자화폐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행사할 목적으로 전자화폐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10년 이하 징역
	형법 제215조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전자화폐를 작성하거나 전자화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	10년 이하 징역
	형법 제216조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전자화폐를 작성하거나 전자화폐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형법 제217조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3조 기재의 전자화폐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	10년 이하 징역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제2호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제3호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제4호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⁸⁾	
	제5호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제49조 제5항 ⁹⁾	제5호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행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제6호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제6호의2	제3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액후불결제업무를 한 자	
	제7호	제37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제8호	제37조제3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제9호	제3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제9호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소액후불결제업무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권유·광고한 자 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그 소액후불결제업무로 구매하도록 한 재화·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제10호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제49조 제6항 ¹⁰⁾	제3호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제4호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자	
	제5호	제37조제3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준 자	
	제6호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7) 이하 범명을 생략함.

8) 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동 규정이 당초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에서 위 규정과 같이 일부 행위태양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음.

9) 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당초 제49조 제4항 제5 내지 10호의 규정이 제49조 제5항 제5 내지 10호에 규정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음.

10) 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당초 제49조 제5항 제3 내지 6호의 규정이 제49조 제6항 제3 내지 6호에 규정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음.

2. 설정 범위

가. 구체적 검토

(1) 제49조 제1항 제1호(권한 없이 전자금융기반시설 접근 등), 제2호(전자금융기반시설 데이터 파괴 등), 제3호(일시에 대량신호를 보내는 등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 오류 또는 장애), 제4호(업무상 지득한 전자금융거래정보 타인에게 제공 등) / 제49조 제3항(전자화폐 위조·변조 등) / 제49조 제5항 제6호(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등록), 제7호(다른 가맹점 명의로 전자화폐 거래), 제8호(전자화폐 거래 대행), 제9호(가맹점 아닌 자가 가맹점 이름으로 전자화폐 거래) ⇨ **제외(견해 일치)**

- 처벌된 사례가 극히 드물어 양형기준 설정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당초 설정 범위에서 제외되었고, 이후로 사정 변경 없음

(2) 제49조 제2항 제1호(접근매체 위조·변조), 제2호(위조·변조 접근매체 사용 등), 제3호(분실·도난 접근매체 사용 등) ⇨ **제외(견해 일치)**

- 처벌된 사례가 드물어 양형기준 설정의 실익이 없고, 통상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절도죄 등 다른 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벌되는데 해당 범죄의 양형인자로 참작하면 충분하다는 이유로 당초 설정 범위에서 제외되었고, 이후로 사정 변경 없음

(3) 제49조 제2항 제4호(부정한 방법 등으로 접근매체 획득 및 이용), 제5호(강제로 빼앗거나 공갈 등으로 접근매체 사용 등) ⇨ **제외(견해 일치)**

- 해당 법조 위반으로 단독 기소되어 처벌된 사례가 극히 드물고, 통상 공갈죄, 사기죄 등 다른 범죄와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처벌되므

로 위 범죄와의 경합범 처리만으로도 충분함

(4) 제49조 제4항 제5호(계좌 정보 제공, 보관, 전달, 유통) ➡

포함(견해 일치)

- 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어 법정형이 상향된 것과 아울러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됨
- 기존에 제49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4호 위반죄가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49조 제4항 제5호 위반죄도 설정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체계에 부합함
- 연도별 사건 수¹¹⁾

단위: 명, %

세부법조			선고년도				전체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자금융 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수	12	38	63	37	150
		비율	8.0	25.3	42.0	24.7	100.0
	제49조 제4항 제2호	수	11	112	193	89	405
		비율	2.7	27.7	47.7	22.0	100.0
	제49조 제4항 제3호	수	-	-	-	2	2
		비율	-	-	-	100.0	100.0
	제49조 제4항 제4호	수	-	2	9	10	21
		비율	-	9.5	42.9	47.6	100.0
	제49조 제4항 제5호	수	-	2	10	9	21
		비율	-	9.5	47.6	42.9	100.0
전체	수	23	154	275	147	599	
	비율	3.8	25.7	45.9	24.5	100.0	

11) ‘제9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수정/설정 대상범죄 분석 II - 보험 및 통신사기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2020. 8. 20.부터 2023. 6. 30.까지 선고사건) 참조

(5) 제49조 제5항 제5호(미등록 전자금융업) ⇨ 제외(견해 일치)

- 동 조항이 적용된 판결례가 많지 않고, 단순히 금융위원회 등록해야 한다는 인식이 결여된 것일 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과 연계된 경우도 드물어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낮음

(6) 제49조 제5항 제6호의2, 제9호의2(2024. 9. 15. 시행) ⇨ 제외(견해 일치)

- 소액후불결제업무에 관하여 신설된 규정으로, 향후 적용사례가 축적된 이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충분함

(7) 제49조 제5항 제10호(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금융 거래정보 열람, 제공) ⇨ 제외(견해 일치)

- 처벌된 사례가 많지 않고 처벌되더라도 통상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있으므로, 양형기준 설정할 실익이 낮음
-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제공받은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다른 범죄와의 경합범 처리만으로도 충분함

(8) 제49조 제6항 제3호(전자화폐 등 거래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제공 거절 등), 제4호(이용자에게 가맹점수수료 부담케 하는 행위), 제5호(가맹점 이름을 타인에게 대여), 제6호(미인가 합병·해산·폐업 등) ⇨ 제외(견해 일치)

- 처벌된 사례가 극히 드물어 양형기준 설정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당초 설정 범위에서 제외되었고, 이후로 사정 변경 없음

나. 설정 범위 정리(추가)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3. 유형 분류

가. 현행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적 범행			
2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나. 검토: 기존 유형 분류 유지 ⇨ 견해 일치

- 범행이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범행 대상 접근매체를 매개로 보이스포싱 등 후속범행이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 및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크므로 행위방식(일반/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을 소유형의 기준으로 삼아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양형위원회에서 현행안이 채택되었음¹²⁾
- 적용대상인 제49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법정형은 동일하고 범죄유형별 형량범위의 폭이 크지 않아 별도 유형분류 필요성이 낮음

세부 법조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7	8	10	12	14	16	18	20	22	24	30	36	42		
1호	수	2	3	31	3	51	1	21	13	19	-	1	3	-	1	1	1	-	-	150	7.53
	비율	1.3	2.0	20.7	2.0	34.0	0.7	13.3	8.7	12.7	-	0.7	2.0	-	0.7	0.7	0.7	-	-	100.0	
2호	수	6	8	61	3	125	-	54	48	57	3	1	23	2	1	9	2	1	1	405	8.71
	비율	1.5	2.0	15.1	0.7	30.9	-	13.3	11.9	14.1	0.7	0.2	5.7	0.5	0.2	2.2	0.5	0.2	0.2	100.0	
3호	수	-	-	-	-	2	-	-	-	-	-	-	-	-	-	-	-	-	-	2	6.00
	비율	-	-	-	-	100.0	-	-	-	-	-	-	-	-	-	-	-	-	-	100.0	
4호	수	-	-	-	-	11	-	1	1	2	1	1	2	2	-	-	-	-	-	21	10.19
	비율	-	-	-	-	52.4	-	4.8	4.8	9.5	4.8	4.8	9.5	9.5	-	-	-	-	-	100.0	
5호	수	-	-	5	-	7	-	1	1	6	1	-	3	-	-	-	-	-	-	21	9.62
	비율	-	-	23.8	-	19.0	-	4.8	4.8	28.6	4.8	-	14.3	-	-	-	-	-	-	100.0	
전체	수	8	11	97	6	193	1	76	63	84	5	3	31	4	2	10	3	1	1	599	8.49
	비율	1.3	1.8	16.2	1.0	32.2	0.2	12.7	10.5	14.0	0.8	0.5	5.2	0.7	0.3	1.7	0.5	0.2	0.2	100.0	

- 법률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된 부분은 형량범위에서 반영하면 충분하고, 새로 설정대상에 포함된 범죄(제49조 제4항 제5호 위반죄)는 기존 유형 분류에 포섭하는 것으로 충분함

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설명자료, 제5면

IV. 향후 일정

- 일시: 2024. 5. 27. (월) 오후
- 장소: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검토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검토